

한중경제포럼

제22-03호 2022년 8월 8일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 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협력방안

2022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 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협력방안
2. 일 시: 2022. 7. 27 (수) 15:00~17:30
3. 발표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쑹즈용(宋志勇) 소장

1.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거대한 성과

-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양국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성과는 ①한·중 무역의 거대한 발전 ②양국 상호투자의 우수한 성과 ③지역경제 협력의 중대한 진전 ④제3국 시장 협력의 지속 발전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한·중 무역의 거대한 발전] 한·중 무역 발전은 크게 △한·중 수교 이전 △한·중 수교~2001년 중국의 WTO 가입 △2002년~2015년 한·중 FTA 체결 △2015년~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 전 △2020년 이후 등 다섯 단계로 나뉨.
 - 제1단계(한·중 수교 이전): 1970년대 말부터 한·중 양국 관계가 완화된 시점이었으나 그 당시 국내적·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었고, 특히 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은 주로 민간교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함.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 양국 간 무역총액은 0.19억 달러였는데 1992년 한·중 정식 수교 시 양국 간 무역총액은 82.18억 달러에 달해 430배 넘게 증가함. 이는 양국 간 무역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2단계(한·중 수교~2001년 중국의 WTO 가입): 1992년 한·중 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 추진을 위한 더 나은 환경

이 조성되었음. 양국 간 무역총액은 1992년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1억 달러로 7.1배 증가함.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잠시 한·중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무역 분야의 매우 강한 상호 보완성으로 양국 간 무역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1999년에 이르러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7년 수준을 초과하였음.

- 제3단계(2002년~2015년 한·중 FTA 체결): WTO 가입 후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에 정식으로 융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 특히 한국과의 경제무역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이 마련됨. 한·중 무역은 지속적으로 급성장하면서 2005년 양국 간 무역총액은 1천억 달러를 초과하여 1,142.72억 달러에 달함.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 경제와 국제무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중 간 경제무역도 그 충격을 받게 됨.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모두 소폭 감소하였으나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영향은 비교적 단기에 국한되었음. 2010년 양국 간 무역총액은 2천억 달러를 초과하여 2,071.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후에도 양국 간 무역은 지속해서 증가함.
- 제4단계(2015년~2019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2015년 한·중 양국은 정식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이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 발전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2015년 양국 간 무역총액은 2,758.1억 달러에 달함. 2018년 양국의 무역총액은 3,134.3억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함.
- 제5단계(2020년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중 무역도 큰 영향을 받게 됨. 2020년 초부터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들의 대외무역이 계속 감소하여 연속 몇 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 그러나 한·중 양국의 상호 보완성은 매우 강하여 양국 무역은 2021년에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고 2022년 들어 다시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주목할 만한 현상은, 2022년 1~6월 한·중 무역총액이 1,842.4억 달러, 중·일 무역총액이 1,771.4억 달러로, 한·중 무역총액이 처음으로 중·일 무역총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임.

- [한·중 양국 상호투자의 우수한 성과] 한·중 경제무역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양국 간 교역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무역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음.

- [한국의 대중국 투자]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는 1.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30년간의 발전을 거쳐 2021년 말 한국의 대중 실제 투자금액은 902.3억 달러에 달했음.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대중 투자 2위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한국의 제2위의 투자대상국이 되었음.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단계로 나뉨.
 - ① 제1단계(1992~2000년, 한국의 대중 투자 시작 시기):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에서는 한 차례 외국인 투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음.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한국의 대중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1992년 한국의 대중 실제투자액이 1.2억 달러에 달했고 그 후에도 지속 성장하여 1997년 중국이 유치한 한국의 실제투자액은 21.4억 달러에 달함. 이 기간 한국의 산업별 대중 투자는 주로 섬유, 제화, 피혁 등 제조업 분야에 집중됨.
 - ② 제2단계(2001~2004년, 한국의 대중 투자 지속 확대 시기):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 관련 약속과 규칙을 이행하면서 국내 법률과 제도를 대폭 수정하였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가 적극 추진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음. 이 기간에 중국은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외국인 투자 첨단기술제품 장려 목록(鼓励外商投资高新技术产品目录)",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음. 이 시기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대중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 규모는 매년 20% 이상 빠르게 성장했음. 2004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62.5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 이 시기 한국의 대중

투자는 주로 전자제품, 컴퓨터, 음향설비, 통신기기 등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대중 투자가 시작되었음. 지역별로는 산둥(山東), 랴오닝(辽宁),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广东) 등 5개 지역에 집중되었음.

③ 제3단계(2005~2011년, 한국의 대중 투자 조정 시기): 이 시기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정책을 조정하였음. 특히 2007년 "기업소득세법"을 발표하며 "양세합병(两税合并)¹⁾"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노동집약형 산업의 외자기업에 다소 불리한 영향을 미쳤음. 그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 투자는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2011년 중국이 유치한 한국의 실제투자액은 25.6억 달러에 그쳐 같은 해 중국의 실제이용 외자총액의 2.2%에 불과했으며, 2001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 반면에 한국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부단히 증가했으며 투자 분야는 전통적인 제조가공업에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고 부동산, 임대, 도·소매 등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함. 투자지역은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위주였지만 중·서부 지역도 주목을 받기 시작함.

④ 제4단계(2012~현재, 대중 투자의 안정적 발전 시기): 2012년 이후 중국은 점차 전 세계에서 가장 흡인력이 있고 성장이 빠른 시장으로 부상했음. 이 시기에 중국은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하여 자유무역협정 추진,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의 방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외자 주식 비중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투자 규범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였음. 이와 동시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목록" 등 여러 가지 외자 관련 법률·법규를 제·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여러 지도의견을 제정하였음. 한국의 대중 투자 목적은 가공수출로부터 내수시장 확대로 전환됨. 2012년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8년(31.3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고 삼성전자, LG, 현대차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증가함.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등 비제조업도 현저히 늘어남. 2012년부터 한국의 대중 투자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9년에는 50억 달러를 상회함.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중국의 대한국 투자]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는 시작이 늦은 편임. 2000년대 들어,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투자 및 경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였고, 한국 정부도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을 발표하여 양국 간 정책 연계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빠르게 성장하였음. 중국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점차 대외투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대한국 투자 또한 점차 증가함. 그러나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에 비하면 투자 건수나 실제 투자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2016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비금융부문 직접투자)는 7.8억 달러였으나 한국의 대중 투자는 47.5억 달러를 기록, 한국 대비 1/6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분명한 특징은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임. 그러나 한국의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비교적 폐쇄적이며 노사분쟁 등 문제가 있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는 비교적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 때문에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2019년 2억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한국의 대중 투자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짐. 대한국 투자가 초기에는 주로 항공, 해운, 금융, 무역, 관광 등의 업종에 집중되었다가 중국기업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제조업 기업의 인수합병, 한국 증권시장 등으로 방향이 전환됨.

- [한·중 지역경제 협력의 중대한 진전] 양국은 2015년에 정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현재 한·중 FTA 후속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2020년 체결한 RCEP은 한·중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

1) 양세합병은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 통합을 뜻함.

고, 양국은 앞으로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음.

- 2004년 한·중 민간 공동연구를 계기로 한·중 양국 연구기관은 FTA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였고, 이후 10년의 시간을 거쳐 2015년 6월 양국은 정식으로 FTA를 체결함.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았음.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은 8차례 관세 인하를 실시하였고 특혜관세 이용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 한·중 FTA의 효과가 점점 두드러짐에 따라 2단계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2017년 12월 양국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공동 선언하고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시장진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앞으로 한·중 FTA 2단계를 통해 양국 간 개방 수준과 무역·투자 협력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와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이 전면 심화되며, 한·중일 FTA 및 아태 일체화 추진을 촉진할 것임.
- 2020년 11월에 RCEP 협정이 체결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음. 이는 한·중 경제무역 관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기회는 양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국과 RCEP 회원국 간 협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 2021년 9월 16일 중국은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고 한국도 이미 CPTPP 가입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 한·중 양국은 앞으로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함께 경제 글로벌화를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제3국 시장 협력의 지속 발전] 한·중 양국은 2015년 제3국 시장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제3국 시장에서 많은 협력의 성과를 거두었음.

- 양국은 2015년 "중국 국가발개위·상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제3국 시장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제3국 공동진출 공동작업반"도 설립하였음.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고 한국도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제기하였음. 2017년 양국 정상은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정책"의 발전전략 연계라는 중요한 공통인식에 도달하였고, 중국 상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중 발전전략의 연계 및 "일대일로" 협력 1.5트랙 세미나의 공동 개최를 논의하고, 학술 차원에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한·중 양국 기업은 모두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객관적인 수요가 있고 또한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음. 한국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과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가격, 금융, 구매 등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이 각자의 우위를 발휘·보완하여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한다면 "1+1+1>3"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실제로 현재 양국은 쿠웨이트 정유공장 신규 건설, 에콰도르 태평양 정유공장, 베트남 산양(son duong) 항구, 에티오피아 통신망·전력망 건설 등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들에서 양국 기업들이 제3국 시장에서 거둔 많은 협력의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양국이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양국 간 무역의 빠른 증가 △무역구조의 지속적 고도화 △한국의 대중 투자 범위 지속 확대 △중국의 대한국 투자 소규모 현상 등 몇 가지 특징이 있음.

- 한·중 무역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

- [종적 비교]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에 비해 2021년에 71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5.9%에 달함. 2021

년에는 2020년 대비 700억 달러 가량 증가함.

- [횡적 비교]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중·일 간 무역총액은 10.4억 달러,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당시 중·일 간 무역총액은 48.2억 달러였음.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중 간 무역총액은 50.3억 달러, 중·일 간 무역총액은 235.8억 달러로 한·중 무역총액이 중·일 무역총액의 1/5정도 수준이었음. 2021년 한·중 간 무역총액은 3,623.5억 달러, 중·일 간 무역총액은 3,714.0억 달러로 차이가 100억 달러 미만이었음. 그러다 2022년 상반기 한·중 간 무역총액이 중·일 간 무역총액을 초과함. 1972~2021년, 1978~2021년, 1992~2021년의 중·일 간 교역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7%, 10.6%, 10.0%인데, 이는 한·중 교역액의 연평균 증가율 15.9%보다 낮은 수준임.

- 한·중 무역구조는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와 관련이 크며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음. 양국 간 무역구조는 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꾸준히 고도화됨.

-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의 상호 보완성은 매우 뚜렷하였음. 중국의 대한국 수출상품은 주로 농산물과 석탄 등 광물자원이었고,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은 주로 철강, 컬러TV, 인조섬유, 전기제품 등 공산품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큰 관련이 있음.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고, 한국은 신흥경제국에서 현재는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음. 한·중 양국의 경제가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점차 전환되었고, 이는 양국 무역 규모의 급속한 확대를 촉진하였음. 양국 무역구조는 원래의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됨.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대한국 수출품은 주로 반도체, 컴퓨터, 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등이고, 한국의 대중 수출품은 주로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임.

- 한국의 대중 투자는 지속적·안정적·빠르게 확대되었고 투자 범위가 부단히 확대됨.

-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는 1.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10억 달러와 20억 달러를 초과했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도 한국의 대중 투자는 계속해서 빠르게 확대되어 2004년에 62.5억 달러에 달했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25~40억 달러를 유지했음.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대중 투자 2위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제2위 투자대상국이 됨.
-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한국의 대중 투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되었음. 한·중 수교 초기에 한국의 대중 투자는 방직의류, 제화, 피혁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었음. 그 후 중국 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면서 투자의 목적이 "제품 가공 수출"에서 "내수시장 개척"으로 전환되어 대중 투자가 점차 전자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술·자본 집약형 산업으로 이동하고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음. 이와 동시에 한국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규모가 작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됨.

- 한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규모가 작은 편임. 100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1,000만 달러의 프로젝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중 FTA 체결 이전에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1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거의 없었음.
- 초기 투자는 주로 요식업에 집중되었고, 투자 건수는 많았으나 평균 투자액은 적었음. 중국기업의 해외투자(走出

去)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투자가 점차 항공·해상운송, 금융·무역 등 서비스업과 자동차, 반도체, LCD 등 제조업 분야로 확대됨.

-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대한민국 투자 분야가 더욱 확대되어 부동산, 금융, 영화·드라마 등 문화예술, 의료서비스, 관광,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에 투자가 집중됨. 이와 동시에 한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는데 의류와 건강식품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전기자동차, 로봇 등 미래발전형 산업이 투자 인기 산업으로 부상함.

□ 그동안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주요 원인은 △양호한 정치관계와 정치환경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안정적인 국제형세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기회 포착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양호한 상호 보완성 등임.

- 한·중 양국은 1992년에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이래 서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대국의 관심사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정상도 우호적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이것이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30년간 꾸준히 발전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음.
- 한·중 양국은 1992년에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그 후 1998년, 2003년, 2008년에 양국 관계가 각각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에는 협력 관계가 양국의 공동발전 실현, 지역 평화에 대한 기여, 아시아의 발전 추진, 세계 번영의 촉진 등 "4가지 부문에서의 동반자"로 확립되었음.
- 중국은 항상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인정하는(求同存异)" 원칙에 따라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고, 한국도 대체로 적극 호응해왔음.
-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확정한 후 중국이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좋은 환경이 마련됨.
-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대중 투자를 확대하는데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됨. 그 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국제규칙을 준수하면서 국내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됨.
- 중국은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함. 개혁개방은 중국이 이미 확정한 발전전략이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나라들과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중요한 기반과 전제가 됨.
- 한·중 경제무역 관계가 지금의 성과를 거둔 것은 안정적인 국제 환경·형세와 관련이 큼.
- 평화와 발전이 전 세계 경제발전의 기초가 됨.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지전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종일관 평화발전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중 경제무역 관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
- 미·중 수교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융합되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함.
-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이 각 나라 경제발전과 국가 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한·중 경제무역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의 대중 투자가 큰 성과를 거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 정책의 변화와 동향을 잘 연구하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에 따른 기회를 잘 포착하였기 때문이며, 중국의 외자정책에 따라 대중 투자를 끊임없이 조정함으로써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국으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상승하였음.
- 한국의 대중 투자는 중국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고 중국 지방경제의 발전을 견인했음.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가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음.
-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의 기술진보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기술이전·기술파급에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
- 물론 한국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통해 많은 이익과 보상을 얻었고, 한국 내 기업의 대중 수출을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 산업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음.
- 한·중 양국은 서로 혜택을 보았고 상호 윈윈을 달성하였음.
- 그리고 한·중 경제무역 관계는 양호한 상호 보완성의 특징이 있음.
-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에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해 줌. 1980년대부터 한국의 무역흑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이 발생되었고 한국 국내기업의 경영원가 상승과 원화 절상으로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었음. 이후 방직의류를 대표로 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이 외부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이 한국기업들의 우선적 선택지가 되었음.
- 중국은 노동력 원가가 낮고, 외자 우대 정책의 혜택이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는 강점이 있어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음. 다른 한편으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이 더욱 확대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이 점차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음. 한국기업들이 대중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의 우대정책 등 장점을 잘 활용하여 일부 산업에서 중국 이전을 가속화함에 따라 대중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음.

2. 한·중 경제무역 관계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

□ 한·중 경제무역 관계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발전, 지역경제 협력, 코로나19 사태 하의 상호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음.

- 중국 경제의 지속적·안정적·빠른 발전이 양국 협력에 거대한 발전공간을 제공함.
- 중국은 시장 발전공간이 거대하며, 곧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중국 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이 처음으로 40조 위안을 초과하여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45조 위안을 초과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의 누적 상품 수입액이 22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음.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세계 각국에 무한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실시하고 있음. 중국은 국내외 형세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발전전략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의 제기는 사실상 한·중 양국 협력을 위해 거대한 발전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한국은 중국의 이웃 나라이며, 자국의 국내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발전전략 중 하나임. 중국이 제기한 쌍순환 전략은 한국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중국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쌍순환 전략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의 소비계층이 꾸준히 확대되고 시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중국의 시장 수요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

- 지역경제 협력이 양국 경제무역 관계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함.
 - 2020년 RCEP의 체결은 한·중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음. RCEP 체결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이전 효과는 한·중 양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임.
 - RCEP의 체결은 한·중 양국이 모두 지역경제 일체화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한·중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은 전 세계 자유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심리 형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음.
 - 한·중 양국은 현재 FTA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중국은 CPTPP 가입 신청을 포함하여 대외개방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한·중 양국이 상호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해 주었음. 한·중 양국은 개방 수준을 높이고 개방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심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중 양국은 CPTPP 가입 면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음. 한국도 이미 CPTPP 가입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 CPTPP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FTA 중 하나로서 출범 이후 많은 국가의 관심을 받았음. 앞으로 양국은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강화하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함.
 -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한·중 양국도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함. 양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였음.
 - 양국 정부와 사회 각 계층은 서로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양국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상대국을 도와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한국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중국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도 “코로나19가 종결된 후 한·중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이 더욱 깊어지고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하였음.
 -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음. 한국 정부는 2020년 2월 중국에 긴급 원조물자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초기 한국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에게 격리기간 숙박시설과 방역물품을 제공하였음. 서울시는 베이징(北京), 충칭(重庆) 등 중국의 12개 도시에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구호물품을 제공하였음. 중국 정부도 한국에 긴급 의료물자를 지원함. 주한중국대사관은 대구시에 의료마스크 2.5만 개를 긴급 지원하였고,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들도 대구·경북 등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던 지역을 지원하였음.
 - 한·중 양국 대사관도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 양국이 협력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서로 지원함으로써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될 것임.
 - 코로나19가 꾸준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녹색통로”를 개설했는데, 이는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현재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은 불안정한 국제 형세, 미국 요인이 유발하는 어려움, 정치외교 등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 한·중 간 무역마찰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현재 세계는 백 년 만의 대격변에 직면해 있음.

-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질서가 재건되고 UN, 세계은행, IMF 등 3대 국제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전쟁 이후 평화발전을 기조로 하는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이 구축되었음.
- 냉전 종결 이후 미국은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 군사,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국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국제질서가 일超多強의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음.
- 미국의 융성은 점차 쇠퇴 기로에 놓임. 미국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국제무대에서의 이미지와 지위도 타격을 입었음. 이후 2008년 금융위기도 미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했음.
- 21세기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방국가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가했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됨. 중국을 대표로 하는 개도국들의 실력이 서방국가들에 “필적”하게 되면서, 양측은 서로 대등하고 균형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음.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대등과 균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세계를 관리하고자 함. 미국은 그동안 구축했던,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포기하고자 하며, 이런 방식은 세계 질서에 막대한 리스크를 가져왔음.
-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전 세계가 백 년 만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음. 미국은 나토(NATO)의 지위를 부단히 강화하고자 하며, 러시아를 타격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중국을 포위하여 압박을 가하는 등 세계 패권적 지위를 지키고자 함. 러-우 전쟁과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이 미국의 세계 패권적 지위를 종결시키는 기점이 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신임을 계속 잃고 있음.

- 미국 요인이 한·중 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유발함.

-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확정하였음. 중국 굴기는 이미 자명한 사실이며, 중국의 경제력과 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옛날에 비할 바가 아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거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2017년 말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정식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확정지었고 중국을 압박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음. 일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미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민감기술이 외부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 외에도 화웨이(华为), ZTE(中兴) 등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내용도 있음.
- 미·중 관계는 글로벌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미국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는 21세기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국 관계이며, 미·중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모두 편 가르기를 해야 하므로 전 세계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과 같은 국제조직을 부단히 구축하고 있음. 올해 봄에 발생한 러-우 전쟁이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으로 한·중 경제무역 관계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

- 국제정치 및 외교 등 요인으로 인해 한·중 경제협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양국 간에 장기간 지속되었던 우호적 협력관계가 난관에 봉착했던 일임. 현재는 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임시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동안 동북아 정세에 많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등 양자관계의 변화가 미래 한·중 경제협력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중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무역마찰 리스크가 점점 확대됨.
- 오랜 기간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경제무역 협력 규모를 빠르게 확대했음. 그러나 중국의 기술진보와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양국 기업 간 경쟁이 노동집약형 산업뿐만 아니라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점차 격화됨.
 - 한·중 무역 규모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나타남. 즉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1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그 후 꾸준히 늘어나 최고 1,000억 달러에 육박하였으며 30년간 누적 규모가 1조 2,614.5억 달러에 달함. 한국 통계에 따르면 1993년부터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음. 양국 데이터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줄곧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 중시해야 할 문제임.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이 모두 동남아, 남아시아, 극동 지역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제3국 시장 내 경쟁이 상품, 산업, 인프라 건설 등에서 심화된다면 양국이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상승하고 양국 간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3. 향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발전 방향

□ 한·중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내실화해야 함.

- 중국이 제기한 쌍순환 전략의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함. 중국 시장의 소비고도화 수요에 맞춰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의 품질과 등급을 향상하고, 대중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대기업 및 대형 프로젝트의 대중 투자 촉진, 대중 투자의 질적 고도화, 대중 한국기업 생산·수출의 고부가가치 발전을 추진해야 함.
-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계기로 중국의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전략과 연계하여 한·중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투자의 분야와 규모를 부단히 확대해야 함.
- 중국의 대외투자 혁신발전 촉진전략과 한국의 지역발전·외자유치 계획을 서로 연계하여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위해 더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촉진해야 함.
- 무역·투자 정책 면에서 양국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무역·투자 장벽의 철폐, 정책의 투명성 제고, 비즈니스

스 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기업을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심도 있는 한·중 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함.

- 정보통신, 자동차, 전자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경쟁자이자 협력자임. 양국은 혁신과 표준·규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의 완비, 동아시아 지역 내 관련 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역내 산업망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산업표준 제정 등을 통하여 양국 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 새로운 기술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은 전통산업의 고도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경제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임. 한국도 주요 선진국으로서 이와 관련된 발전전략을 제기하였음. 양국은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및 혁신산업 분야에서 거대한 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미래 주목받는 중점 분야로서, 양국은 5G, AI, 반도체, 칩, 바이오의약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그 밖에 양국은 모두 저탄소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녹색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국은 저탄소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가 가져온 거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RCEP이 체결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음. 특히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15개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일체화의 발전을 추진하며 자국 경제의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입장과 바램을 보여주었음. 이는 또한 한국과 중국이 모두 협력 강화와 지역경제 일체화 추진을 기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하는데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었음.
- 한·중 양국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왔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는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음.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한·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양국이 공동 협력·공동 발전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표징이 됨.
- 한·중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입장을 잘 조율하여 일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얻어내고, 다른 한편으

로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함. 한·중·일 FTA의 체결은 세 나라에 모두 유리하며, 유리한 점이 불리한 점보다 더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중·일 FTA의 협상을 추진해야 함.

□ 더욱 원활한 산업망·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의 큰 충격으로 인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이 시험대에 놓여있음.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산업망·공급망의 본토화·지역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은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되었음.
-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국으로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종결 이후 코로나19가 양국 경제무역 관계와 산업망·공급망에 미친 영향에서 출발하여 어려운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진지하게 연구함으로써 양국 산업망의 심도 있는 협력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해야 함.
- 앞으로 한·중 양국은 더 나은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관세를 인하하며 장벽을 제거하고 국경 간 병목을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공급망을 보장하고 상생협력의 산업망·공급망을 구축해야 함.

□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이미 긴밀한 경제무역·산업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무역·투자 협력을 추진해 왔음. 양국은 각자의 우위를 발휘하여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더 큰 범위에서 Win-Win을 달성해야 함.
- 제3국 시장 협력은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임. 기술, 자금, 생산력, 시장 등 상호 보완이 되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제3국에 가성비가 높고 경쟁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삼자 윈윈”을 달성할 수 있음. 앞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협력 플랫폼으로 하여 한국기업이 보유한 자금·기술 면의 우위와 중국기업이 보유한 프로젝트 건설 경험과 인적자원 우위를 결합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넓은 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것은 한·중 양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한·중 양국은 다른 국가들의 협력 경험을 참고하여 제3국 협력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하며 한·중 공동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등 인프라 건설, 에너지, 물류 등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은 산업단지 기획과 프로세스 관리에 노하우가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해외 경제무역 협력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한·중 산업단지 공동 건설을 모델로 삼아 앞

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해외산업단지 건설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해외사업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음.

질의응답(Q&A):

Q 1. 얼마 전에 한국 언론에서는 대중 무역적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이슈화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인으로 인해 중국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발생한 것인지?

A 1. 조금 전 저의 발표 중에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문제가 줄곧 존재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 증시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음. 현재는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흑자가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임. 개인적으로 볼 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함. 아직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 일부 문제들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의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한·중 간 무역구조를 보면 반도체 칩과 관련 제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최근 한국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chip4)'에 8월 말까지 가입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함. 한국의 칩4 가입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많은 반도체 칩 관련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함.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임. 미국과 같은 대국이 한국기업에 대해 반도체 칩을 비롯한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다면 대기업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다른 한편 중국 국내기업들은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칩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농담 중에는 "만일 어떤 국가가 특정 제품에 대해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면 중국 내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가 늦춰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음. 이는 매우 이해하기 쉬운 논리인데 만약 기업이 적은 비용을 들여 기술이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미국에게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감사하다"라고 해야 할 것임. 만약 미국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 대해 대중 수출을 금지한다면 중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에 성공할 것임. 앞으로 5G, 3나노 또는 5나노 반도체 개발 등이 중국에 있어서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 수량이 전년 대비 몇십억 개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국의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을 것임. 앞으로 한·중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은 글로벌 환경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발전과도 관련되어 있음. 우리는 한·중 무역이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며 약간의 무역흑자나 적자가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함. 현재 중국이 직면한 환경과 중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무역흑자나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최근 십몇 년간 중국 언론에서는 무역흑자나 적자에 대한 이슈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보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슈화되지는 않고 있음.

Q 2. 오늘 제안해 주신 협력 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제3국 시장 협력과 관련하여 한·중 간에 산업협력단지를 건설했던 경험을 삼아서 RCEP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의 제3국 시장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한·중 양국이 제3국 시장에서의 산업 협력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충분히 진행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하여 중소장님의 견해를 여쭙보고 싶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IPEF를 자유무역협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일대일로"가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것처럼 IPEF도 자유무역협정이 아님. 경제협력을 위해 미국이 주장하는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음. 현재 IPEF에 참여하기로 한 나라를 보면 RCEP 15개 회원국 중에 11개 국가가 동참하기로 함.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대일로", RCEP, IPEF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음.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 IPEF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연맹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도 함께 IPEF에 참여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나 자유무역, 공급망과 관련하여 더욱 안정화·고도화시키기 위한 협력체로 같이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IPEF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 의견이나 중국 정부 입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 A 2. IPEF가 제기된 후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되었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이 제기한 IPEF는 내용상으로 관세 인하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FTA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이니셔티브라면 많은 나라들은 그것의 역할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IPEF의 방향성은 매우 명확하여 의심할 바 없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IPEF가 중국에 주는 인상은 그리 좋지 않음. IPEF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나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관세 양허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참여국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면 IPEF의 미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으리라 생각함. IPEF를 일종의 이니셔티브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목적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함.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최근 행보는 모두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IPEF 또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함. IPEF가 제기된 초반에 중국 정부, 학자 및 언론이 모두 이를 주시했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잠잠해졌음. 중요한 것은 IPEF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단기간 내에는 중국 내에서 다시 이슈화되지 않을 것임. 만약 미국이 앞으로 관세 양허 등 내용을 추가하고 IPEF를 FTA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아마 많이 주목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함. 그리고 한국은 중국도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국제협력에 대해 줄곧 찬성하는 입장임.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중 무역 발전이 거대한 성과를 거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 대외개방 확대를 견지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한 데 있음. 그러나 중국이 나중에 IPEF에 가입할 의지를 표명한다고 해도 만약 미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절대 찬성하지 않으리라 생각함. 앞으로 IPEF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세계가 과거의 냉전 시기처럼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전력을 다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견제 대상 1순위는 중국이며, 러시아에 대한 견제는 단지 나토(NATO) 활성화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앞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음. 그러나 현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형세가 점점 더 긴장되고 있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중국을 참여시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함.

Q 3. 오늘 발표 중에 자유무역협정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분야에 관해 설명해 주셨음. RCEP 양허안을 보면 국가 간에 양허안(상품 관세 인하 리스트)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RCEP에서 한·중 간에 서로 주고받는 양허안을 보면 한·중 FTA 상품 양허안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도(관세 인하 대상의 품목)가 90%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한·중 협력을 고도화하고 RCEP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중·일 3국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한·중·일 FTA가 이른 시일 내에 체결되어 지역협력 고도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중 관계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한·중 FTA 2단계 협상(서비스와 투자 분야)이 진전되어야 하겠지만 상품 분야의 양허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협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A 3. 개인적으로 매우 찬성함. 중국의 발전과정은 대외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비록 중국의 대외 개방이 일부 분야에서 개방 속도가 비교적 느리게 추진될 수는 있어도 중국은 개방의 발걸음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 협상이 빨리 진전되기를 바람. 2단계 협상이 2017년에 시작되어 벌써 5년이나 지났음. 2단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실시되어 발효가 되면 그다음으로 양국의 상품무역 개방도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저희도 학자로서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호소할 것임. 중국은 그동안 대외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왕래를 통해 끊임없이 자체 실력을 향상시켜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음. 중국기업의 발전이든 국내 산업구조 조정이든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의 향상이든 막론하고 모든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크게 기여한 점을 빼놓을 수 없음.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점점 더 향상되고 개방도가 점점 더 확대되길 바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모범이 될 수 있길 바람. 현재 중국이 FTA를 체결한 주요 경제대국은 한국과 호주임. 호주의 경제구조는 한국과 완전히 다름. 한·중 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이 앞으로 캐나다·영국 등 더 많은 대형 선진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데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함.

Q 4. 지금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제로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로코로나 정책이 언제 끝날 것인지, 중국 경제는 언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4. 제로코로나 정책이 언제 끝날지는 말하기 어려움. 개인적으로 보고 느꼈을 때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함. 지난번 베이징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났을 때 차오양(朝阳), 핑타이(丰台) 등 여러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였음. 사실 연구기관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요식업 등 서비스업은 큰 충격을 받게 됨. 방역 정책에 관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데 중국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국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고령자 수가 비교적 많은데 위드코로나를 실시한 후에 만약 고령층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중국 사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임. 현재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감기나 일반 독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도 이와 관련하여 충분히 연구를 진행한 후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방역 정책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생각함. 중국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먼저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차 실시하는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을 취해왔음. 코로나19 방역 정책도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그곳에서만 위드코로나를 시험적으로 진행해 보고 만약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드코로나의 실시 범위를 점차 확대하다가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중국은 미국처럼 몇백만 명의 사망자를 감당하기 어려움. 저도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있는데 몇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완치되었음. 해외에서는 대부분 자체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개인적으로 볼 때 단기간 내 정상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함.